

# 한국의 경제 성장과 對日 경제 교류

유관영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 개관

60년대 초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과 함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동된 이후 30년 동안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달성했다. 산업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성장은 생산재를 수입, 조립·가공한 최종재를 수출하는 가공 무역형 성장 패턴을 근간으로 하여 생산·수출 구조의 다양화·고도화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동안 수출입의 급속한 신장과 함께 GNP의 수출 의존도는 1965년의 9.5%에서 1993년에 29.8%로 크게 높아졌으며, 수입 의존도 역시 65년의 15.9%에서 1993년에 30%로 높아진 점은 바로 가공 무역형 성장 패턴을 반영한다. 생산·수출 구조 면에서도 60년대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경공업 제품·표준화 제품이 생산·수출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이후 산업 발전에 따라서 생산·수출의 다양화·고도화가 진전되어 중화학 공업 제품의 생산 비율과 수출 비율이 65년 당시의 각각 34.8% 및 13.7%에서 93년에는 69.9% 및 62.4%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성장에 일본과의 경제 교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다. 韓日 경제 교류는 1965년에 성립된 韓日 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본격화되어 한편으로 자본·기술 도입,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을 통한 교류의 형태를 취하면서 확대되어 왔다. 이 兩者는 하나가 다른 한 형태의 기반을 조성하고 또 그것이 거꾸로 다른 한 형태의 가일층의 확대를 조건 지워 주는 형태로 상호 밀접한 관련 하에 움직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은 1994년 말 현재 누계 기준으로 차관 도입에 있어서는 21.7%, 직접 투자에 있어서는 51.7%, 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48.4%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역에서도 수출의 14.1%, 수입의 24.9%를 일본에 의존하게 되어 한국 경제의 일본에 대한 밀착과 의존 관계는 매우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치로 보는 한, 지난 30년간 한국이 가공 무역형 성장을 추구해 온 과정에서 對日 경제 교류는 한국의 공급 능력 확대와 경쟁력 배양 그리고 수출 증대 등 수급 양면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점에서 韓日 경제 협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첫째, 동태적으로 볼 때 韓日 경제 교류를 둘러싼 韓日間 利害가 줄곧 일치해왔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30년이란 韓日 경제 교류 기간의 전반 15년 즉, 韓日 國交 正常化 이후 70년대까지는 한국에 있어서 소위 개발 연대에 해당되는 기간으로서 전형적인 가공 무역형 성장 방식과 중화학 공업화 전략 하에서 연평균 9%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룬 기간이다. 국내 저축 기반이 취약했던 상황에서 1962년부터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의욕적인 경제 개발을 계획했던 한국은 이에 필요한 외자를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통하여 조달할 필요가 컸다. 특히, 가공 무역형의 성장 전략을 취했던 한국의 생산재 수입선으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 이에 오랜 식민지 지배 하에서 한국의 생산 기술 체계가 일본의 그것에 매우 가까운 형태로 형성되어 온 점,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 일본의 생산재가 막강한 가격·비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점 등 한국의 생산재 수입선이 일본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업화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플랜트,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입과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화학 공업 제품의 시장 확

대와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노동력, 환경 문제 등의 제약 해소를 위한 필요성에서 韓日 경제 교류는 활발히 전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70년대까지의 개발 연대와 비교하여 한국 경제가 기술 축적과 함께 자생력을 갖추면서 투자 조정 하의 안정 성장, 수입 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개방화, 그리고 엔고로 이어지는 80년대 이후에는 양측의 利害가 그 이전만큼 일치되지 않았다. 80년대 이후 무역, 자본, 기술 등 모든 경제 교류에서 한국의 對日 의존도가 낮아진 점은 이 점과 무관하지 않다. 70년대까지의 개발 연대에는 수출 확대에 필요한 생산재의 對日 수입 확대, 투자 재원의 對日 조달,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對日 기술 도입 수요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의 생산·기술 기반이 강화된 80년대 이후에는 산업 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분야 즉, 비표준화 분야를 필요로 했는데, 이에 일본이 적극 협력하는 것은 한국과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80년대 이후 무역 거래에 있어서 工程間 분업과 제품 차별화 분업 등 산업내 분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가공·高부가가치·고도 기술 제품은 일방적으로 對日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의 기술 격차 분업이다. 일본인 투자와 對日 기술 도입에 있어서도 일본은 韓日間 경쟁시대로 인식하여 한국이 필요로 하는 성장기 단계의 제품 분야에 대한 기술 제공이나 직접 투자가 소극적이었

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일본은 자국의 경쟁 우위가 잠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對韓 직접 투자나 기술 제공 등을 실시하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從來의 기술 도입이나 직접 투자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협력보다는 韓日 기업간 생산·업무·기술 제휴 등 다양화된 협력 패턴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기술 수준 향상에 따라 보다 차별화된 협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對日 경제 교류가 한국 경제의 과도한 對日 의존성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것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 누증의 주범으로 작용한 점이다. 물론 이 점은 한국의 산업화 방식에서 연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해도 한국이 중화학 공업화와 수입 대체에 보다 내실을 기했다더라면 경제적 효율성을 기하면서 對日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셋째, 일본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對日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이 각종 수입 억제적인 규제와 관행을 적극 철폐하여 수입 시장을 좀더 개방했다면 한국은 보다 對日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韓日 경제 교류를 통한 파이의 분배가 비대칭적이었던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對日 경제 교류를 통하여 만성적인 무역 적자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외형적인 경제 성장을 기했다. 즉, 한국은 對日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 수요 증대에 따른 유발 생산 효과의 많은 것을 일본에 누출시키는 이른바 비충족적

산업 구조를 갖게 되어 과도한 對日 수입 의존도, 對日 무역 적자폭의 확대라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역 거래에서만 연유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외향적 성장 전략, 투자 재원의 조달 방식, 전반적인 산업 구조와 연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자국 경제의 균살을 빼고 고도화하는 데 한국 시장을 최대한 활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교류 형태별 분석

### 對日 무역

韓日 국교 정상화 이후 對日 수입 의존도는 73년 38.5%를 피크로 하여 이후 줄곧 저하되어 94년 14.1%에 이르고 있다. 개발 연대인 70년대까지는 20~30%대에서 변동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1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수출 규모 확대에 따라 수출선이 다변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나 어쨌든 한국의 수출 확대에 대한 對日 수출의 기여는 개발 연대에 비하여 8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對日 수출 의존도는 67년의 44.5%에서 94년에 24.9%까지 저하되었으나 對日 수출에 비하면 그 저하폭은 적다. 70년대까지는 30%대의 對日 수입 의존도를 보였으나 80년대 이후에는 20%대의 對日 수입 의존도를 보임으로써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0년대까지의 개발 연대

에 특히, 한국의 생산·수출 능력 확대에 對日 수입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줄곧 수입의 對日 의존도가 수출의 對日 의존도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對日 무역 적자폭은 확대되었다. 수출, 수입 모두 86년 이후에는 엔고의 급진전에 따라 對日 의존도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對日 수입 주종 상품의 경우 對日 수입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對日 수입량을 다소 줄인다 해도 수입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對日 무역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또 하나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對日 무역 상품 구조를 보면 수출의 경우, 주종 상품이 60년대 개발 초기의 섬유와 잡화류에서 전기·전자와 철강·금속 중심으로 수출 상품 구조의 다변화·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전자를 제외한 일반 기계나 수송기기 등의 對日 수출이 매우 저조한 점에 비추어 對세계 수출 상품 구조에 비하여 對日 수출 상품 구조의 고도화 진전도는 낮은 편이다.

對日 수입 상품 구조를 보면 수입의 대중을 이루는 자본재 수입의 對日 의존도는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일본이 제 1의 수입선이다. 그동안 자본재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입 대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韓日間 기술 격차로 인하여 한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高가공·고도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를 일본에 의존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韓日間 분업 구조 하에서도 일본이 폐쇄적인 시장을 개방하여 수입 확대에 적극 노력했다면, 한국의 對日 수출은 보다 확대되어 對日 무역 적자도 축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 對日 자본 도입

對日 자본 도입은 對日 청구권 자금 도입, 차관 도입, 直合作 투자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청구권 자금은 한국의 개발 초기라고 볼 수 있는 1966년 이후 1975년까지 5억 달러가 도입되어 농어촌 개발,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부분에 투입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 개발의 저변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청구권 자금은 『일본 측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으로 供與되는 타이드·론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對韓 중화학 공업 제품 수출의 수단이자 이후 對韓 자본 진출의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75년 이후에는 차관 도입이 對日 자본 도입의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7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 베이스의 공공 차관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74년 이후에는 延拂 수출을 중심으로 한 민간 베이스의 상업 차관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미쓰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대자본 계열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한 것도 이러한 차관을 통해서였다.

일본의 상업 차관은 플랜트 수출이라는 형태로 供與된 것이기 때문에 기계 설비를 비롯 중간재, 원자재 등 일본의 중화학 공업 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금 협력과 동시에 이루어진 플랜트 중화학 제품의 수입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편입되어 공업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韓日 경제 협력 방식이 프로젝트별로 일본에서 자본재, 기술을 도입하고 원료나 반제품을 수입, 조립, 가공하여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본 또는 제 3국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수출은 증가하지만 對日 수입은 더 한층 증가하여 對日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차관에 이어 일본의 對韓 직접 투자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인 1972~76년에 한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의 85%를 일본이 차지할 정도로 일본 기업의 對韓 투자 러시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對韓 투자가 급증한 것은 한국이 외자를 크게 필요로 하여 외자에 대한 개방 우대책을 실시했다는 점도 있지만, 일본 측으로서도 국제 수지의 만성적인 흑자 대책의 하나로써 대외 투자에 대한 一聯의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점, 엔의 절상에 의해 대외 투자 코스트가 인하된 점, 노동 집약적 산업이 노동 코스트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대외 진출이 불가피했던 점 등의 배경을 안고 있었다.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발 선도 부문에 중점을 두는 등 誘致업종의 선별화를 통해 국내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일본인 투자가 축소되면서 투자 업종도 과거의 섬유, 잡화 중심에서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중화학 공업 분야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 말 현재 건수 누계로 볼 때, 일본인 투자의 업종별 구성은 제조업 77.4%, 서비스업 18.7%, 농·축·수산 2.3%, 광업 1.6%로 되어있다. 특히, 제조업의 업종별로 보면, 전기 및 전자가 20.1%, 기계 20%, 화학 11.8%, 섬유 9.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인 투자가 한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기간별로 볼 때, 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표준화 제품 분야에 대한 한국의 수요가 컸고, 일본 역시 한국의 저임금 등을 활용한 생산 입지 추구형의 對韓 직접 투자를 통해 자국의 비교 열위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양국의 이해가 합치되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산업 발전, 기술 축적에 따라 성장기 단계의 제품 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진 반면, 일본으로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협력이 일본의 경쟁 우위를 잠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韓日間 이해의 상충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나 기술 도입의 對日 의존도 저하를 가져온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80년대 중반 이후 엔고는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급격한 엔고가 비표준화 제품 분야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이나 부품의 해외 조달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몰고 감에 따라 對韓 투자도 다시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때, 70년대까지는 일본의 對韓 직접 투자가 低임금 활용·수출 지향형이었다면 80년대 이후에는 低임금 메리트의 감소, 수입선 다변화 실시 등에 따라 엔고 활용·시장확보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직접 투자보다는 OEM 방식을 비롯, 韓日 기업간 생산·업무·기술 제휴 등으로 협력·거래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 對日 기술 도입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1966년부터 시작되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인 70년대 전반까지는 70%대의 높은 對日 의존도를 보였으나, 1975년 이후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 도입선을 점차 다변화하였음을 반영한다.

對日 기술 도입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한국의 전체 기술 도입의 구성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기계 32.3%, 전기·전자 24.6%, 화학 16.3%의 순으로 중화학 공업 내지는 성장 산업 부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 점에서 기술 도입의 경우도 일본인 투자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그동안 일본 기술에 크게 의존하게 된 이유는 일본 기술이 갖는 諸특성 및 韓日間 지리·문화적 근접성 등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일본 기술 선호 경향과 크게 관련된다. 이와 함께 빠른 속도로 산업화, 수출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손쉬운 조립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 우리나라의 기술 수요에도 크게 부합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對日 도입 기술은 주로 조립 중심의 표준화된 생산 공정 관련 기술로서 시장 지향적인 성격이 강했다.

韓日間 기술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첨단 기술 내지는 핵심 기술을 얼마나 도입했는가 하는 기술 이전의 질적인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 이전의 부메랑 효과 등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산업이 일본 기술을 크게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이러한 일본 기술이 한국의 가공 무역형 성장 과정에 내재(built-in)되어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던 요인의 하나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술 도입의 경우에도 기술 자체만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原部資材, 부품, 제품, 설비 등이 도입되는 만큼 기술 도입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이것이 對日 수입을 유발한 측면에서 본다면, 對日 기술 도입이 적어도 對日 역조 축소에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